다산포럼

염무웅

‘반값 등록금’ 정당하고 가능한가

매년 학기 초만 되면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들 등을 휘게 만들었던 등록금 문제가 이번에는 캠퍼스 바깥으로 비화되어 우리 사회의 핵심적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광화문 촛불집회만 하더라도 벌써 열흘째로 접어들고 있고, 현장에서 잡혀가는 대학생들 사진이 연일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우리 현실에서 이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이 사태를 통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회에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지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생각해야 할 문제는 학생들 등록금으로 대학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의 원천적인 정당성 여부이다.

한 국가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그 사회의 차세대 구성원을 낳고 기르고 가르치는 일이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 사회구성의 중추부대인 젊은 세대들이 출산·육아·교육에 불안과 공포감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이다. 그런 점에서 대학등록금은 언젠가는 아예 없앨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 필수적인 국가유지비용의 하나이다.

그런데 목전의 이슈는 ‘반값등록금’이다. ‘반값등록금’이란 아이디어는 2007년 대선에서 엠비의 당선에 일조한 한나라당의 공약이었다. 그해 3월 9일 김형오 당시 원내대표의 발언, 역시 그해 6월 21일 이주호 당시 제5정조위원장(현 교육부장관)의 언급, 그리고 선거운동이 시작된 10월 ‘경제살리기특위’(위원장 이명박) 안에 ‘등록금절반인하위원회’(위원장 임해규)를 설치하기까지의 과정을 돌아보면, 대통령이 자신의 입에 ‘반값등록금’이란 낱말을 직접 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내 공약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현재의 그의 막중한 위상에 비추어 창피한 일이다.

나는 단연 ‘반값등록금’이 정당할 뿐더러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의 여러 법적·제도적 조건들을 그대로 둔 채 등록금만 절반으로 줄이려고 한다면 엄청난 저항이 따를 뿐만 아니라 부작용 또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며칠 전에는 사립대 총장들이 모여 등록금인하를 논하기 이전에 국가의 재정지원을 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는가. 덮어놓고 국고지원을 한다면 부패한 사학들의 배만 채울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가의 재정지원 없는 반값등록금은 두말할 것 없이 사학운영에 치명적이다. 서울의 일부 사립대학들이 5000억 원이 넘는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다고는 하지만 등록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오래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대학에 지원하는 막대한 국가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과 대학에 지원되는 국고가 어떻게 적절히 투명하게 사용되는가를 감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숫자에 밝은 사람도 아니고 예산이니 결산이니 하는 데는 더욱이나 문외한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는 전문가가 나서야 책임 있는 논의를 하겠지만, 그래도 해법의 방향만 말한다면 재벌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일정한 증세를 통해 국가재원을 대폭 늘이는 한편 4대강사업 같은 터무니없는 낭비를 제거함으로써 복지와 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리란 것이다.

다른 한편, 사학을 지원은 하되 규제하지 않는 묘수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학들 내부에 스스로 감시하는 자기정화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12월 개정된 사학법의 ‘개방형이사제’가 말하자면 그런 장치들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알다시피 사학법은 그 후 개악되었고, 일부 사학들은 조금 남아 있는 견제장치마저 완전히 없애기 위해 백방으로 로비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더욱 통탄스러운 것은 교육부 산하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3년 사이에 과거의 비리재단·족벌재단을 속속 복귀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따져본다면 오늘 대학생들이 목이 터져라 외치는 ‘반값등록금’ 구호는 현재로서는 안타깝게도 절벽에 대고 계란을 던지는 격에 가깝다. 작금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연달아 패배한 여당이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대선을 겨냥해 쓰레기통에 버렸던 카드를 다시 꺼내 만지작거리는 정경이 눈에 선히 보이는 것이다.

그렇거나 말았거나 지난 3년여 동안 혹독하게 학습효과를 쌓은 우리들로서는 남이 버렸던 카드라도 다시 잘 닦아서 진정한 개혁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해야 한다.

〈영남대 명예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정부, 물가 오름세 숫자 놀음할 때 지났다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않다. 물가가 각종 국내 경제 지표의 추락을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 서민 가계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물가상승에 대한 체감지수는 단순한 숫자 놀음의 단계를 넘어 서고 있다. 이는 삼겹살, 김치찌개 백반, 자장면, 짬뽕, 칼국수 등 서민들이 주로 찾는 외식 품목의 가격 인상 폭이 입증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외식품목 38개 가운데 가장 많이 가격이 오른 품목은 삼겹살로 1년 전과 비교하면 14.5%가 상승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 4.1%의 3배가 넘는 수치다. 돼지갈비 상승률도 1월 6.0% 이후 지난달은 14.3%를 기록했다.

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메뉴인 자장면이나 짬뽕 역시 지난달에는 8%가 넘는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점심 메뉴로 자주 찾는 설렁탕이나 냉면, 김치찌개, 된장찌개 가격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훌쩍 뛰어넘었다. 1년 전 4인 가족이 저녁에 삼겹살 4인분과 냉면 네 그릇을 사먹고 5만 원대에서 해결됐다면 지금은 6만~8만 원을 넘게 줘야 하는 셈이다. 실제로 요즘 점심 메뉴 가운데 5000원 이하 품목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서민들이 많이 찾는 외식 물가의 높은 오름세는 ‘일시적 현상’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감소 등으로 경기둔화 추세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물가불안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본격적인 경기회복은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서민물가가 좀처럼 안정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제 원자재가의 급등 상황에서 내년 대선과 총선 등 국내 정세의 불안까지 겹쳐 물가 정책의 선택 폭이 매우 좁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방위적인 물가 압력을 차단하는 게 급선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고 총력전에 임해야 한다.

아동범죄 무방비 또다시 ‘뒷북타령’할 건가

광주시내 학교 주변이 여전히 아동범죄에 무방비 상태라고 한다.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김수철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광주에서도 그동안 대낮에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하는 등 범죄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김수철 사건 이후 광주시교육청과 경찰청, 각 지자체들이 나서서 ‘학교 안전지킴이’를 자처했으나 지금까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전체 초등학교 147곳 가운데 경비실을 설치해 경비원이 상주하는 학교는 36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11개 학교는 예산 지원이 없어 경비원을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구청이 노인 일자리를 겸해 교통 및 안전지도를 했던 ‘아동지킴이’ 사업도 55개 학교에서 예산을 이유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아동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도 1년이 지나면서 의지가 나약해졌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하루 2~3번씩 학교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이 올해 들어 매주 1~2차례 정도로 순찰을 줄였다는 게 학교 측의 전언이다.

사건이 터지면 범인 검거나 대비책 마련 등 부산을 떨면서도 정작 시간이 지나면 ‘뒷짐’을 지는 당국의 안이한 처사가 또다른 사건을 부르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교육 당국은 모든 학교에 경비실을 설치해 입구에서부터 방문객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범죄로부터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보다 예산이 우선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경찰도 학교와 주변의 안전조치를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에는 CC-TV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일대가 우범지대로 전락해서야 되겠는가. 지금이라도 당국과 지역사회는 적어도 학교 안에서는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뛰놀 수 있도록 안전망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NGO 칼럼

치과주치의 제도 필요하다

이금호

한국사회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유병인구가 증가하여 의료비 급증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대표적인 구강질환인 충치와 잇몸병 또한 마찬가지다. 한국인의 다빈도 질환 3위와 5위를 차지하는 두 질병은 주로 아동 청소년기에 빈발하고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어떤 만성질환보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현재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의해 전국민이 치과의료보장을 받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보장성이 40%에 불과하다. 치과에 갈 때 누구나 치료 비용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대책의 하나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치과주치의 제도는 의미 있다.

‘치과주치의’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겠지만 서유럽과 북유럽의 다수 나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무상의 치과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주치의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다.

치과주치의란 한 명의 치과의사가 다수의 아동청소년의 주치의가 되어 구강병을 치료하고 더 이상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해 주는 의료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의료행위를 하면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해주는 방식)로 의료가 진행되는데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관리와 예방보다는 치료중심의 의료가 될 수밖에 없다.

반면 정해진 금액을 미리 의료기관에 지불하고 그 금액으로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주치의제도 하에서 의사는 치료보다는 관리와 예방에 중점을 둔 진료를 하게 될 것이고 환자의 입장에서도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체득할 수 있어 좋다.

치과의사회·지역아동센터가 벌이고 있는 ‘틔움과 키움’(이사장 김기현)은 이러한 치과주치의제에 기반을 둔 사업이다.

어린싹을 잘 틔워서 키우듯 우리 아이들을 지역사회의 관심과 도움으로 잘 키워보자는 것이 틔움과 키움이다.

건강, 심리, 문화 세 측면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건강영역은 치과, 가정의학과, 한의원, 약국 등이 광주지역 지역아동센터와 주치의 자매결연을 맺고 치료와 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 치과진료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정성호)와 40여 개 지역아동센터의 자매결연을 통해 매년 1회의 구강검진 및 치료, 교육사업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보철이나 교정 등 고가의 비용이 드는 경우는 아동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하반기 선정과정을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병원은 치료 목적으로 간다는 인식이 강해 정기검진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고, 치과에서 예방교육을 할 만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다 보니 치료 중심으로 진료가 흐르는 경우도 있다.

특히 현재 틔움과 키움에서 담당하는 40여 개의 센터수는 미비한 수준이며, 광주지역 200여 개의 전체 지역아동센터 수를 감안해 볼 때 요즘 화두가 되는 보편적 복지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보편적 복지차원의 치과주치의제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주치의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좀더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효과가 분명한 초등학교나 중학교 차원의 시범사업은 광주시교육청에서도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치과주치의제를 지원한다면 아동·청소년들의 구강 관리가 올바른 궤도에 오를 것이라 믿는다.

〈틔움과 키움 운영위원장·이금호치과의원 원장〉

기 고

공무원, 비리 vs 기증

강은숙

지난 3일, 상반된 모습의 공무원에 대한 뉴스가 나왔다.

나주시청 공무원 50여 명이 사무용품 지출 예산을 부풀려 수천만 원을 빼돌린 사건이었다. 더욱 충격을 금치 못하는 건, 어느 특정 부서가 아닌 대부분 부서에서 진행됐고, 이 돈은 부서 회식이나 직원 전별금 등으로 사용됐다고 한다. 주민행정을 위해 책정된 예산이 공무원들의 회식비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또 다른 뉴스는 공무원 2000여 명이 상여금을 모아 만든 여수 성산공원의 정원이다. 이 장미정원은 2년 전 시청 공무원의 상여금을 모아 조성한 것이라고 한다.

한 사람당 적게는 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십 만원씩 십시일반으로 모은 기금 4억3000만 원으로 3000여㎡에 장미 9600여 그루를 심어 시민들에게 선물을 했다고 한다.

나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사는 공무원 중에 한쪽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돈을 뺏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 자신들의 뱃속을 챙긴 것이고, 다른 한쪽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준 셈이다.

어떻게 똑같이 시험을 보고 똑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한쪽에서는 비리가 난무하고, 한쪽에서는 나눔 실천으로 지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사익 지향적 사회구조 때문이다. 일부 공무원들이 자신이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익보다는 사익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걸리면 부정 부패행위지만 안 걸리면 관행이라는 식의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낮은 처벌 수위도 문제가 된다.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되면 강력한 징계처분으로 다시는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 공직자들 뒤에 부정부패라는 단어가 붙는 뉴스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장미정원 같은 따뜻한 나눔의 실천 사례를 더 많이 접할 수 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본다.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에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윤리에 대해 뇌물은 아무리 비밀리에 주고 받더라도 반드시 드러나는 근거로 사지론을 제시했다.

‘하느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내가 알고, 상대가 안다’는 사지론을 공직자들의 가슴속에 다시 한 번 새겨야 할 때이다.

〈광주시 북구 동림동〉

無等鼓

성김

한국과 미국이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은 129년 전이었다. 1876년 조선이 일본과 수호통상조약을 맺어 개항하자 극동진출을 노리던 미국도 수교를 서두르게 된다.

한·미간 외교관계는 청나라가 일본을 견제하는 속셈에서 현실화됐다. 1879년 청국의 리훙장((李鴻章)은 일본의 조선침탈을 견제하고 자국의 위신을 높이고자 당시 조선 영부사 이유원에게 미국과의 수교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조선은 1882년 5월 22일 제물포에서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조선 측 전권대신 신헌과 미국 측 전권공사 슈펠트(Robert W. Shufeldt)가 전문 14조로 구성된 조약을 맺음으로써 한·미 외교관계가 시작됐다.

조·미 통상조약은 조선의 구미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문호개방의 신호탄이었다. 이후 조선은 영국, 독일 등과 잇따라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국제 외교무대에 등장했다.

한국에서 미국 대사는 매우 상징적인 존재다. 특히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망을 불러와 한국에 광복을 안긴 연합군의 주도국이었다. 또 한국전쟁과 전후 한국사회 전반에 미친 미국의 영향력은 매우 컸다. 따라서 주한미국대사의 위상이나 역할은 누구와도 견주기 어려울 정도다.

이처럼 중차대한 지위를 갖고 있는 미국 대사에 최근 한국에서 태어난 후 아버지를 따라 이민 간 성 김(한국명 김성용)이 새로 임명됐다. 그의 이력은 낱낱이 소개돼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관심은 그가 북한 전문외교관이라는 데 모인다.

성 김을 만난 이명박 대통령이 “10차례 이상 북한을 방문해놓고 왜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느냐”고 조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수교 129년 만에 첫 한국계로 임명된 미국대사 성 김은 한반도에 어떤 바람이 불게 할 것인가?

/박치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봉사활동 포함시켰으면

지역의 동사무소가 2007년 9월 1일 주민센터로 바뀌면서 단순 민원업무 처리공간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제공 장소로 바뀌었다.

동 주민센터는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요일·시간별로 노래교실, 요가, 한문교실, 국악, 스포츠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민은 건강 유지와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를 위한 생활의 기폭제로 활용하고 있다. 주민이 공용시설의 일정공간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삶의 가치를 향상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들 주민은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와는 반대로 생활이 곤란한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간에 쫓기는 서민은 주민센터 프로그램 이용이 어렵다.

따라서 주민센터 프로그램 일부를 봉사활동 시간으로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어려운 주민과 함께 마을 축제에 참여한다거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등 가까운 이웃을 찾아보는 것도 봉사활동의 한 방법이다.

주민센터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의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모태가 될 것이다. 삶의 가치가 스스로 건강유지에서 나보다 못하는 이웃을 되돌아보는 양식으로 바뀌는 모습이야말로 지방자치시대의 참 모습이 아닌가.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주체자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봉사활동과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등 봉사활동 발전소 역할을 하여 나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보자.

▲김덕중·광주시 남구 주월1동

인터넷에 빠진 ‘은둔형 외톨이’ 증가 경계해야

집밖에 나가지 않고 인터넷만 하는 사람을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라고 일컫는다.

히키코모리는 보통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서 취미나 용무가 있을 때만 외출한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생필품 구입을 위해 편의점에 간다’ ‘자신의 방에서는 나가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자신의 방에서조차 나가지 않는다’ 등과 같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일본에서는 이 같은 히키코모리가 급격히 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일본 내에서만 70만 명에 육박한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히키코모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인구도 155만 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과연 일본만의 문제일까.

우리나라도 IT분야 세계 최강국으로 인터넷 보급, 인터넷 속도, 인터넷 이용자 수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이와 함께 인터넷 중독 인구도 함께 늘면서 일본처럼 히키코모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각 지자체와 교육청에서는 학교와 협조를 통해 히키코모리가 될 가능성이 큰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뒤 대책을 세워야 한다. 미리 대처하고 치료하지 못하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 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르며, 자칫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히키코모리는 장기간 방치되면 우울증이 심해지거나 사회에 대한 반감이 커져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서둘러 대책을 세웠으면 한다.

▲남준희·광주시 남구 진월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